

생산일: 2001.6.18

이 자료는 강연(2001.6.18(월) 09:10 예정)
이후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보 도 자 료

제목: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, 서울국제투자금융포럼 초청
특별강연

주요 내용

- ☐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은 6.18(월) 09:10, 제2회 서울 국제투자금융포럼(주제: 한국금융시장의 미래)에 참석하여 「금융현안과 향후 금융정책방향」이란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였음

<제2회 서울 국제투자금융포럼 개요>

- ☐ 주제: 한국금융시장의 미래
- ☐ 주최: 재경부, KDI, UBS위버그증권, 파이낸셜 뉴스
- ☐ 일시: 2001.6.18(월) 09:10~09:40(30분)
- ☐ 장소: 서울 여의도 CCMM빌딩 6층 연산 파라다이스홀

※별첨: 강연자료

보도자료 생산과: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(500-5341~3)
권혁세 금융정책과장, 고경모 서기관

재정경제부 공보관

제2회 서울국제투자금융포럼
초청 특별강연

금융현안과 향후 금융정책방향

2001.6.18(월)

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진 념

1. 지난 3년간 금융개혁의 성과

(금융개혁 실적)

- ☐ 우리의 경우 과거 중남미와 달리 위기 이후 곧 바로 금융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위기상황을 조기에 진화

- ▶ 572개의 금융기관이 합병·정산 등으로 정리
- ▶ 137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지원
- ▶ 건전성 감독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
- ▶ 금융지주회사 설립, 대형 우량은행간 합병
- ▶ 상시적인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

(금융개혁에 대한 평가)

- ☐ 금융개혁을 통해 경제와 금융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하드웨어 측면에서 개혁의 기틀 마련
- ☐ 그러나, 소프트웨어 면에서 아직도 경영혁신이 미흡
 - 특히, 공적자금투입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가 미흡하고 구조조정의 주체가 될 금융 기관의 경험과 노하우 부족, 자율성과 책임의식 부족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미흡했다는 평가

2. 우리 금융의 현주소 및 향후 환경변화

(금융의 현주소)

①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작아 범위의 경제, 포트폴리오 다변화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한계

* 세계 100대 은행중 미국 18, 일본 19, 독일, 10, 한국 2개/국내 상위 5대은행의 규모는 미국 상위 5대은행의 10%

② 수익구조면에서 선진 금융기관에 비해 크게 미흡한 수준

* ROA(90년대 평균) : 미국 1.08, 외은지점 1.65, 한국 △0.15

* 수수료 수입비중(99년) : 미국 36.1%, 영국 32.3%, 한국 24.6%

* 무수익여신 비율(99년) : 한국(6.6%, 00년), 외은지점(1.17%), 미국(1.15%)

③ 국내은행의 위험관리 능력이 미흡하여 담보대출비율이 높음

* 신용대출 비율 : 한국 50.1%, 미국 59%, 외은지점 80%

④ 금리·주가·환율 등 거시금융지표는 안정*되고, 기업의 자금사정도 개선 추세 지속

* 금리: 31.11%(97.12) → 7.37%(01.5말), 환율: 1,956원(97.12) → 1,283원(01.5말)

○ 다만, 시중자금의 단기화 등으로 시장기반은 여전히 취약한 가운데 하반기 회사채 만기도래 문제와 일부 대기업의 조속한 처리 등이 불안요인으로 작용

(향후 금융환경 변화)

① 금융산업간 진입장벽 완화 및 수익구조 변화

- 전자거래 ⇒ 시간적·공간적 제약 사라지고 고객밀착형 서비스 확대
- 수익창출원의 변화: (은행) 예대업무에서 벗어나 자산운용관련 자문업무수요가 증가
(증권) 중개마진 축소, 인수·국제·벤처투자업무 등에 중점

② 금융시장의 통합과 국제화 촉진

- 정보통신기술 발달·금융개방 ⇒ 국제금융시장 통합
-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시장 진출 확대(고부가가치부문) ⇒ 경쟁 심화

③ 금융의 증권화(securitization)현상 가속화

- 저금리기조 + 증권관련 금융자산 선호도 증가 ⇒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비중 확대
 - 특히, 주식연계상품을 통한 자산의 유동화 및 자금조달 증가
- 국제적 syndicated loan, project financing 등 국제시장에서의 자금조달 증대

3. 우리 금융의 현안과제

가. 하반기이후 자금시장 전망과 대책

□ 하반기 만기도래 회사채 34조원중 실질적인 차환발행부담은 8조원~13.5조원수준

○ 하반기중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을 통한 P-CBO 발행가능규모가 최대 16조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 전체적으로 차환에 큰 애로가 없을 전망

- 단, 국채·통안증권·예보채 등의 적절한 분산발행 등을 통해 마찰적인 문제 발생에도 대비

□ 내년도 회사채 만기도래분은 30조원*수준으로 금년도(65조원)의 절반수준으로 금융시장의 부담은 크지 않음

* 30조원에는 신속인수 만기도래분(6조원)와 P-CBO 내년 만기도래분(6.2조원) 포함

□ 현대문제 등 남아 있는 시장불안요인을 금년 상반기중 해결, 고수익채권시장(Junk Bond) 시장의 조기 육성, 부실기업 상시구조조정과 기업의 자체 신용향상 노력을 통해 대응

⇒ 하반기부터는 시장기능의 완전한 정상화 도모 및 시장자체 차환발행여건 조성

나. 금융인의 도덕적해이 해소

☐ 지난 구조개혁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금융관계자의 도덕적 해이를 하루빨리 해소

(주요 사례)

- ▶ 기업의 구조조정 프로그램 마련단계에서 국내은행의 분석능력 부족 등으로 외국계 금융기관이 주도
- ▶ 구조조정 프로그램 실행단계에서 일부 국내금융기관의 소극적 태도, free-riding문제 등

☐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융종사자들의 도덕성과 책임의식 제고가 중요

☐ 정부는 시스템과 관행의 개혁을 통한 근본적인 예방에 노력

- 각종 공시제도와 회계정보의 투명화를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개선
- CEO를 포함한 전 임원진에 대해 경영목표(ROA, 주가 등)에 연동된 incentive 및 책임 부과
*공적자금 투입은행: 예보와 맺은 MOU내용 철저히 점검 → 필요시 보완 및 이행 강화
- 사외이사 제도 효율적 운영, 엄격한 감독을 통한 감시 및 견제 강화
- 공신력있는 신용평가회사 육성

다. Equity Financing의 활성화문제

□ Debt위주의 기업채무구조를 Equity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E-F 활성화 필요

* 기업의 차입금의존도(%)	<u>한국(00)</u>	<u>미국(99)</u>	<u>일본(98)</u>	<u>대만(95)</u>
(차입금+회사채)/총자본	41	28	34	25

* 시가총액/GDP(%)	<u>거래소</u>	<u>뉴욕</u>	<u>나스닥</u>	<u>영국</u>	<u>대만</u>
	36.5	120	56.5	180	128

- 발행시장 선진화: 상장·등록·유상증자 절차 간소화, 주식연계채권발행제도 개선 등
-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거래질서 확립: 집단소송제 도입, 회계제도 개선, 불공정거래 감시
- 시장운영체제 선진화: 거래시장간 업무연계성 강화, 거래소 등의 국제협력 강화등
- 장기안정적 주식수요기반 확충: 연기금 주식투자 활성화, 기업연금제도 도입, 자사주제도 확대 등

※ 현재 학계·업계·연구기관 공동으로 작업반을 구성·연구중이며, 동 결과가 나오면 공청회·금발심 등을 거쳐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

라.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

- ☐ 건전성 유지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국제적 기준에 맞춰 엄격히 해 나가되, global 시대에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
 - 금융기관의 창의력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규제완화 효과를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 업무영역과 관련한 규제의 과감한 완화를 검토
- ☐ 현행 열거주의(positive system)방식 → 포괄주의(negative system)로의 단계적 전환을 검토하되,
 - 이와 병행하여 금융기관 도산 용인 및 이를 감내할 수 있는 튼튼한 시스템,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감독 수준도 향상될 필요

마. 투자은행의 활성화문제

- ☐ 직접금융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 ⇒ 중요한 인프라의 하나인 투자은행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

- 당장 세계일류의 투자은행은 어렵겠지만, 국내 유동자금의 조직화를 통해 필요자금을 조성하고 우선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투자은행을 유도
- 필요시 정부는 업무영역과 관련한 규제완화 등을 통해 영업활성화 여건 마련
- 업무의 연관성으로 볼 때 현재 중개위주의 단순화된 업무를 수행하는 증권사가 미국의 투자은행과 같이 자문업무, M&A 업무, 부동산 매각 업무 등으로 다양화하는 방안도 가능
- 이는 추가 규제완화 없이도 상당부분 해결 가능

바. 자산운용관련 규제 통합문제

- 은행투신, 투신사, 뮤추얼펀드 등으로 다기화된 자산운용산업을 종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체계를 검토할 필요(영·미에서는 단일법 또는 기능에 의한 규제)
- 단, 다수의 법률을 개정해야 하고, 투신사가 구조조정중이므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면서 추진

사. 은행소유제한 완화문제

- ☐ 현재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원칙하에 은행에 대해 동일인 소유한도를 4%로 제한 (단, 외국합작은행은 외국인 지분을 만큼 내국인 지분소유 가능)
- ☐ 그동안 은행 책임경영체제 확립(주인 찾아주기) 차원에서 은행 소유제한 완화논의가 있었으나, 이제는 은행 소유구조 완화에 대해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할 시기
 - 내외국인간 차별을 시정
 - 주주에 의한 경영감시 강화를 통해 수익성을 추구하는 영리기업으로 재탄생
 - 단, 대주주인 산업자본에 의한 전횡과 사금고화는 방지할 수 있도록 동일인 여신한도 제한 등 대주주에 대한 자산운용규제는 강화할 필요

아. 저금리시대의 금융기관 수익성 확보문제

- ☐ 저금리시대의 정착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적정투자처 및 수익의 확보라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

- * 특히, 확정금리형 장기 상품을 주로 판매하는 보험사의 경우 현재의 저금리기조하에서 자금운용부담 확대
→ 단, 이에 대응하여 변액보험판매 허용 예정(금년 7월부터)

□ 종전의 저위험 저수익 투자(국공채, 담보대출 등) → 고위험 고수익투자(junk bond, 주식, 파생상품, 개인신용대출 등)으로 전환 예상

- 투자형태 변화에 대응한 자산운용규제 완화와 함께 고위험 투자 확대에 따른 리스크관리 능력 제고 및 감독 강화 필요

자. 부실기업의 신속한 정리

□ 기업부실의 확산방지와 발생한 부실의 신속한 정리를 위해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중

- 금감원에서 대상기업 1,544개를 선정하고, 반기마다 은행에서 평가 실시 → 문제발생시 필요조치사항을 법원 등에 건의
- 지난번 여야정 포럼에서 합의추진키로 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(6월 임시국회 심의예정)은 이러한 상시구조조정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

차. 공적자금 문제

☐ 최근 맥킨지는 이자보상배율 2미만인 기업의 총부채(245조원)를 잠재부실로 보고, 78조원의 추가공적자금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

- 2000년말 현재 전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규모는 50.2조원(금감원이 국제적 기준에 의해 파악)
- 맥킨지와 동일한 방식에 의해 이자보상배율 1미만인 상장기업을 기준으로 부실을 계산할 경우에는 공적자금의 추가조성이 필요없다는 결론에 도달

* 이자보상배율 2기준의 논리적 취약성

- 99년기준 이자보상배율 2미만 기업은 상장기업 전체의 60%정도로서 이들중 상당수가 정상 영업
- 2000년만 해도 기업의 수익성제고 및 부채축소노력으로 이자보상배율 개선 효과가 상당 ⇒ 정태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동태적으로 접근해야 함
 - * 제조업평균 이자보상배율: ('99) 96.1% → ('00) 157.2%, 이자보상배율 1미만 제조업 비중: ('99) 32.6% → ('00) 26.3%
 - * 제조업 부채비율: ('99) 214.7% → ('00) 210.6% (대우제외시 동기간중 190.4% → 167.4%)
- 맥킨지측도 이자보상배율 2를 의도적으로 높게 선정했다는 문제를 인정

☐ 따라서, 현재 시점에서 공적자금의 추가조성은 필요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

4. 맺음말

□ 금융산업의 경쟁력 ⇒ 국가경제 전체의 경쟁력과 직결

- 정부는 지난 3년간 System개혁을 통해 제도적 틀 마련 ⇒ 앞으로는 Software개혁에 중점
- Software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금융인의 자율과 책임의식이 중요
 - 아무리 제도가 잘 되더라도 사람(금융인)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작동되지 않음

(금융인에 대한 요청)

- ▶ 개혁 성공은 금융인들의 자율·창의를 바탕으로 책임경영이 이루어 져야 가능 ⇒ 금융인들의 보다 배전의 노력 당부

예) 금번 Hynix DR발행 성공은 기업구조개혁에 있어 좋은 사례

(정부의 노력)

- ▶ 상시개혁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제도를 보완
- ▶ 공정한 룰 제정과 감시자의 역할, 자본시장·회계제도 등 인프라 구축, 자금시장 안정노력 강화

(해외 투자자에 대한 요청)

□ 끝으로 국제투자금융포럼의 기회를 빌어 해외투자자에게 요청

○ 한국은 여러 가지 면에서 향후 중장기투자에 적합한 여건

- 한국은 다른 개도국에 비해 기반산업의 기초체력이 튼튼하고, 새로운 IT분야에도 강점
- 일부 요인*으로 인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측면 ⇒ 산업과 개별 기업의 본질적 내재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주가도 저평가되었다는 분석

* 기업의 투명성에 대한 불신, 기업부실우려에 따른 금융부문의 잠재부실문제, 노사관계 문제 등

- 그 동안의 제도개혁과 관행의 개선으로 기업과 금융 전체의 투명성이 크게 개선
- 금융기관도 기업의 부실에 대비하여 상당액의 충당금을 적립
-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으로 기업구조조정도 보다 신속하게 추진예상
- 물론 정부도 이에 안주하지 않고 필요한 개혁조치를 중단없이 계속

○ 이제 한국은 국제시장에서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야 하며,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해 나갈 것임